

# 중소기업의 유·무형 서비스 대북 이전 수요 설문 조사<sup>1)</sup>

## 중소기업의 남북 경협 추진 의향

### 1) 남북 경협 사업 추진 계획

- 중소기업의 77.0%가 남북 경협 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으며, 그 가운데 21.5%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 - 추진 형태에서는 위탁 가공 사업(49.1%)을 가장 선호
  - 업종별로는 가죽·가방·신발 업종(100.0%)과 목재·종이·출판·인쇄 업종(81.3%), 섬유·의복 업종(78.2%) 등 경공업 부문이 남북 경협 사업 추진을 가장 고려하고 있음

▶ 추진 계획	▶ 추진 형태
• 적극 추진: 21.5%	• 위탁 가공 49.1%
• 상황을 보아가며 추진: 55.5%	• 대북 투자: 25.5%
• 현재 추진중: 1.2%	• 단순 교역: 25.4%
• 추진할 의향이 없음: 21.8%	

### 2) 남북 경협 추진 절차에 대한 인지도

- 중소기업의 70.1%는 남북 경협 추진 절차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,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됨

▶ 추진 절차 인지도
• 모르고 있음: 70.1%
• 약간 알고 있음: 29.0%
• 매우 잘 알고 있음: 0.9%

1)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998년말(11.16~12.16) 전국의 중소 제조업 3,000 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유·무형 서비스 보유 현황과 대북 이전 관련 수요 및 의향을 우편이나 FAX로 조사 분석함으로써, 유·무형 서비스의 대북 이전을 희망하는 남북 경협 업체들의 어려움과 과제를 제시하여 추진 시책에 반영코자 설문 조사한 것이다.

### 유휴 설비 보유 현황과 원인

#### 1) 유휴 설비 보유 현황

- 중소기업의 55.0%가 유휴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전체 설비 가운데서 유휴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'21.0% 이상' 되는 업체도 22.0%나 되는 것으로 조사됨

##### ▶ 유휴 설비 보유 현황

- 10% 이하: 21.6%
- 21% 이상: 22.0%
- 11~20%: 11.4%
- 유휴 설비 없음: 45.0%

#### 2) 유휴 설비 보유 원인

- 유휴 설비를 보유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'수주 물량 감소' 가 37.0%로 가장 높았으며, 그 다음으로 '기술 개발에 따른 공정 변경' (28.2%), '생산 품목의 축소' (12.7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##### ▶ 유휴 설비 보유 원인

- 수주 물량 감소: 37.0%
- 기술 개발에 따른 공정 변경: 28.2%
- 생산 품목의 축소: 12.7%
- 생산 공정의 외주 전환: 9.9%
- 사업 전환: 2.3%
- 과다한 시설 투자: 2.2%
- 기타: 7.7%

### 유휴 설비의 대북 이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
#### 1) 정부의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 추진에 대한 업계의 의견

-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휴 설비의 대북 이전을 통한 남북 경협 활성화에 대하여, 대부분의 중소기업(72.9%)은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고 국내 유휴 설비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

▶ 정부의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 추진에 대한 업계의 의견

- 남북 관계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적극 추진: 48.4%
- 국내 유휴 설비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도 추진: 24.5%
- 대북 이전의 필요성은 있으나 북한의 수용 가능성 및 이전 방법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음: 26.3%
- 대북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음: 0.9%

## 2) 유휴 설비의 대북 이전 사업 추진에 대한 참여 의사와 추진 이유

- 정부나 중소기업 지원 기관 등에서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의 64.9%가 참여할 것으로 조사됨

- 유휴 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하는 남북 경협 사업의 추진 이유로는 '북한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활용을 통한 생산 원가 절감 목적'이 40.8%로 가장 높으며, 그 다음으로 '국내 기술의 이전의 용이함' (9.8%), '원자재 조달 및 판매 시장 확보 목적' (9.7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▶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 추진에 대한 참여 여부

- 참여하겠음: 64.9%
- 참여하지 않겠음: 35.1%

▶ 유휴 설비의 대북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

- 북한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활용을 통한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: 40.8%
- 국내 기술의 이전이 용이하기 때문에: 9.8%
- 원자재 조달 및 판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: 9.7%
- 남북한 관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: 9.5%
- 통일 후를 대비하기 위해: 8.7%
- 관세 면제 등에 의한 이윤 확보를 위해: 7.1%
- 외국에 헐값으로 처분하기 보다는 북한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: 6.2%

## 3) 유휴 설비의 대북 이전 사업 추진시 희망 지역

- 유휴 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하는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중소기업은 '남포·해주·원산을 중심으로 한 해안권' (33.2%)과 '평양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' (29.1%)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

- ▶ 유휴 설비의 대북 이전 사업 추진시 희망 지역
- 남포·해주·원산을 중심으로 한 해안권: 33.2%
  - 평양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: 29.1%
  - 휴전선 인접 지역: 20.9%
  - 나진·선봉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: 12.7%
  - 기타: 4.1%

#### 4) 유휴 설비를 북한의 이전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로 계획

- 유휴 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로에 대해서는 제3국으로 수출하겠다는 업체가 50.1%로 가장 높게 나타남

- ▶ 유휴 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로 계획
- 제3국으로 수출: 50.1%
  - 북한 내수 시장 확보: 26.2%
  - 남한으로 반입: 22.5%
  - 기타: 1.2%

#### 5) 유휴 설비의 대북 이전 사업 추진시 소요 비용과 조달 방법

- 유휴 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하는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업체당 소요 비용은 평균 5 억 4,900만 원으로 조사되었음
  - 그 비용은 정부의 정책 자금으로 조달하겠다는 업체가 54.5%로 가장 높게 나타나,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 추진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- ▶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 추진시 업체당 평균 소요 비용
- 5억 4,900만 원
- ▶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 추진시 소요 비용의 조달 방법
- 정부의 정책 자금 이용: 54.5%
  - 남북협력기금 이용: 21.6%
  - 자체 자금으로 조달: 12.6%
  - 금융 기관으로부터 차입: 8.6%
  - 기타: 2.7%

## 6) 유휴 설비의 대북 이전 사업 추진시 바람직한 방식

- 유휴 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하는 남북 경협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식으로는 '유휴 설비 등을 북한에 제공하는 설비 제공형 위탁 가공 방식'이 32.2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그 다음으로 '북한에 중소기업전용공단을 조성하여 이전하는 방식' (26.2%) 등의 순으로 조사됨

▶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식

- 유휴 설비 등을 북한에 제공하는 설비 제공형 위탁 가공 방식: 32.2%
- 북한에 중소기업전용공단을 조성하여 이전하는 방식: 26.2%
- 정부나 중소기업 지원 기관에서 매입하여 북한에 제공하는 방식: 16.6%
- 직접 투자하는 방식: 15.4%
- 유휴 설비를 북한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북한산 물품을 반입하는 단순 물자 교역 방식: 9.6%

## 7)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주체나 창구

-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주체나 창구로 중소기업의 71.3%가 중소기업 관련 지원 기관(중소기업진흥공단, KOTRA 등)을 꼽고 있음

▶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주체나 창구

- 중소기업진흥공단, KOTRA 등 중소기업 지원 기관: 71.3%
- 정부: 18.5%
- 전문성 있는 민간 알선 단체: 4.5%
- 중소기업협동조합: 4.2%
- 개별 업체 독자적으로 추진: 1.5%

## 8)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애로 사항

-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최대의 애로 사항으로 '대북 투자의 불안정성'이 29.5%로 가장 높으며, 그 다음으로 '남북 관계의 불안정성' (20.4%), '북한 당국의 부정적인 태도' (13.7%), '북한에 대한 정보력 부족' (13.2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▶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애로 사항

- 대북 투자의 불안정성: 29.5%
- 북한 당국의 부정적인 태도: 13.7%
- 추진 절차의 복잡성: 6.0%
- 북한측 파트너 선정: 4.0%
-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: 20.4%
- 북한에 대한 정보력 부족: 13.2%
- 추진 자금력의 부족: 5.0%

### 9) 유휴 설비 대북 이전을 통한 남북 경협 활성화 과제(정부 부문)

- 유휴 설비의 대북 이전을 통한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'대북 투자 안정성 보장'이 34.3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그 다음으로 '유휴 설비 대북 이전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' (14.5%), '민관 합동의 추진 기구 구성' (12.9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▶ 유휴 설비 대북 이전을 통한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사항

- 대북 투자의 안정성 보장: 34.3%
- 유휴 설비 대북 이전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: 14.5%
- 민관 합동의 추진 기구 구성: 12.9%
- 남북 협력기금이나 재정 지원을 통한 투자 손실 보전: 7.2%
- 북한에 남한 기업 전용 공단 조성: 6.5%

### 유휴 설비 제공을 통한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

▶ 설비 제공 위탁 가공 교역의 활성화

- 반출된 생산 설비의 운전 및 기술 지도를 위해 북한내 최소한의 실무급 기술자 체류 협용과 물류비 절감 요원

▶ '남북한산업협력추진센터(가칭)' 설치

▶ 설비 제공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

- 남북 협력기금의 확충, 해외 투자 기업체들에 대한 지원 자금(해외시장개척자금과 기금, 해외투자자금, 해외대출) 및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가운데 일부를 활용하여 지원

▶ 설비 제공 남북 경협 사업의 제도적 장치 마련

- 투자보호협정, 이중과세방지조약, 통행·통신협정, 대금 결제 방식 등 남북한 당국자간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분쟁 해결 방안 강구

▶ 북한내 중소기업전용공단 조성

- 원칙적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기관이 부담하여 입주 업체로부터 건설 비용을 회수하되, 필요시 남북 협력기금 등에서 지원

▶ 대북 이전 가능한 설비의 DB화와 제도 보완

▶ 남북 경협 추진 절차에 관한 설명회 개최